

새정치, 여수·화순 전략공천에 선거판도 요동

알기쉬운 선거법 (12)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탈락후보 반발 ... 상당수 무소속 출마 검토

일부 후보 조직력 갖춰 치열한 접전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지난 11일 여수시장 후보와 화순군수 후보로 주철현 전 광주지검장과 구충곤 전 전남도립대 총장을 사실상 전략 공천함에 따라 반발한 상당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면서 여수시장과 화순군수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여수시장 선거=애초 주철현 전 지검장과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로 했다가 전남도당의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12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수에는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밀실 아합한 전략공천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불합리한 전략공천이 철회 될 때까지 시정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여수 정가에서는 김 전 의장이 오랫동안 시장선거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당의 전략공천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경우 탈락 후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불출마를 선언했던 무소속 김충석 현 여수시장도 최근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시장은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하지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비리 때문에 수

사'를 받고 있어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등 온갖 허위사실이 난무해 매우 분개하고 있다"며 "새 야당이 애초 약속을 깨고 기초단체 공천을 하기로 함에 따라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출마를 고려했지만 최근 유언비어가 나의 평생을 짓밟을 정도로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출마 여부를 다시 고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수시장 선거는 무소속 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화순군수 선거=무공천 방침이 전략공천으로 바뀌면서 구충곤 전 총장을 제외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임호경·전형준 전 화순군수는 탈락 후보 무소속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민종기·류복열·김성인 예비후보

등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화순 정가의 전망이다.

여기에 애초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던 임갑수·배동기·구복규·맹환열 예비후보 등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어 화순군수 선거는 다자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화순군수 예비후보는 "이번 화순군수 선거는 후보 난립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심하게는 20% 득표율만으로도 당선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 간 경쟁이 어느 선거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법정형 하한 도입... 공소시효 10년으로

문)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어떻게 강화됐나요

◇공무원의 선거개입 규제 이유는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인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취지이다.

◇공무원 단체도 선거운동 금지=공무원의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만큼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조치다.

만일 공무원이 과반수인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그 단체는 공무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형 하한 도입,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왔다. 그런데 지난 2월13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관여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한편,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선거개입 공무원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공직에서 퇴출하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겠다.

◇대표적인 선거개입 유형=총재부터 문제되어 온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선거개입 유형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위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기공식 거행 ▲업무외의 출장 ▲업무관련 기관·단체 방문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이 없어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명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은 물론, 통·리·반의 장, 바르게살기협의회·세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 공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광주 국회의원 5명 시당 공천관리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광주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 당원들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이장한 부장판사)는 12일 고모씨 등 당원 3명이 광주 지역 국회의원 5명을 상대로 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공관위원)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해임청구권 등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공관위원 해임 소송 등 분안 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당 정관 등에는 분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공천 심사가 마무리된 뒤 나와 가처분을 인용했다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결론과는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천심사에 앞서 결정을 내려 논란을 정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원들은 공천 전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박해자·장병완·임내현·김동철·강기정 의원이 공관위원에 포함돼 경선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해당 의원들에 대해 공관위원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김한길·안철수대표 예방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김한길(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시민통합형 선대위 구성

기존 캠프관계자들 반발에

국회의원들 외곽 지원키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가 12일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대거 참여한 시민통합형 선대추진위원회 구성했다.

하지만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과 기존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선거 캠프 구성이 완료되기까지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정배 전 의원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으로 하자는 윤 후보의 제안도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일단 보류되는 등 선거캠프 구성을 놓고 내홍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이 선거캠프 내에서 상주하는 직책을 맡지 않기로 하는 등 선거운동 중심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향후 선거운동 방향이 주목된다.

12일 윤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후보를 지지했던 박해자·강기정·김동철·장병완·임내현 등 지역 국회의원 5명은 윤 후보의 선거캠프에 직접 참여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강력 반발이 이

어지면서 선거 캠프에서 손을 떼고 소속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키로 했다.

박해자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은 윤 후보 선대위와 관련해 어떤 공식 직책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 소속 후보인 만큼 외곽에서 윤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후보 측은 이날 조영택 전 국회의원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 실무를 총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재구 전 광주부시장, 오세철 전 금호타이어 사장, 정찬용 서남해안포럼 상임대표, 이강 전 들불기념사업회 이사장, 바수 무릎 유니버설 문화원장 등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군인·환자 등 거주지 우편투표 13~17일 신청

장기 입원환자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6·4 지방선거에서 우편 투표하려면 13~17일에 시군구청 등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정행정부는 "13일부터 5일동안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 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투표소에서 먼 영내·합정에서 장기 생활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 입소자 또는 교정시설 수감자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 ▲중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도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 머무르는 경우 통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 센터에서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안행부는 사전투표일(30·31일)과 투표일(6월4일)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신분확인용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함께 적기 결정했다.

다만 인터넷 열람용 투표인명부와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교부용 투표인명부에는 도로명주소만 기재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가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맥태, 산낙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로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견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농업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형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형영 투레류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